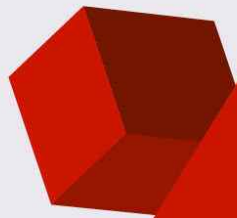




민주언론시민연합



5·18기념재단  
The May 18 Foundation



# 5·18 민주화운동 악의적 왜곡·폄훼 왜 계속되는가

2023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2023. 11. 28 <sup>Tue</sup> 오후 2시 30분  
상연재 컨퍼런스룸11

## 순서

### 사회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사말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발제	2023 포털뉴스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제언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3
	유튜브 5·18 왜곡·편향 콘텐츠 확산 실태와 문제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14
토론	김윤철 경희대학교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 기자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소중한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	26 30 34 40
부록	민주언론시민연합 5·18민주화운동 언론모니터링 프로젝트 활동 경과	43



## 발제

### 2023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표현 포털뉴스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제언 -포털뉴스와 포털뉴스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

#### 1. 포털뉴스 모니터 대상과 분석 방법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5년부터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습니다. 2013년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관련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인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한 것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5·18정신을 훼손하는 보도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는 국민 상당수가 뉴스 기사와 악성 댓글, 유튜브에서 혐오표현을 접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털뉴스 댓글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편향 표현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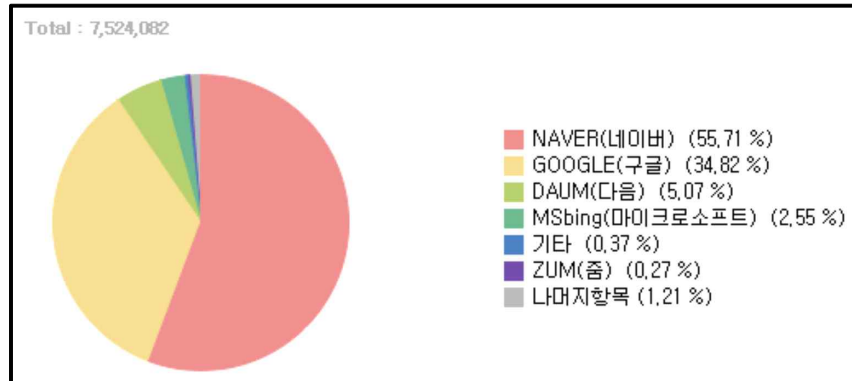
포털뉴스의 경우, 2022년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기준 상위 1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으로 검색하여 나온 기사와 기사에 달린 상위 20개 댓글을 분석했는데요, 2023년에는 모니터 방식에 다소 변화를 주었습니다. 언론사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가 집중되는 5월에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5·18 광주’와 ‘5·18 광주’로 검색한 뒤, 중복 데이터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계없는 데이터를 제외한 기사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5·18 관련 보도가 비교적 적은 6~8월에는 2022년과 마찬가지로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기준 상위 1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5·18 광주’와 ‘5·18 광주’로 검색한 뒤,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상위 20개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 2. 5월 포털뉴스 : 여야 대결과 오월단체 갈등 중계 집중

##### 네이버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 1,253개 분석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타파크로스’ <주간이슈 TOP 10-2023년 5월 3주 차>(5월 22일)에 따르면, ‘제43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23,542회 온라인 언급횟수를

기록했습니다. 타파크로스가 제43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화’, ‘발전’, ‘이루어’ 등과 같은 감성어가 도출되어 민주주의를 쟁취한 의의를 되새기고 평화를 염원하는 반응”이 확인됐는데요.



△ 포털사이트 점유율(5/1~5/31) (출처 : 인터넷 트렌드)

국민 상당수가 뉴스를 소비하는 포털사이트상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 트렌드의 데이터를 근거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점유율이 가장 높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5·18 관련 기사 1,253건을 분석했는데요.

분류	보도 건수
정치인 5·18 행사 참석	350건(27.9%)
5·18 행사문화캠페인	275건(21.9%)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159건(12.7%)
전우원 행보	90건(7.2%)
5·18부상자화공로자회와 시민사회 갈등	81건(6.5%)
5·18 진상규명증언기록	67건(5.3%)
5·18 왜곡허위조작편해 발언과 대응	36건(2.9%)
이륜차 폭주족의 폭주예고와 경찰단속	28건(2.2%)
국가보훈처의 계엄군 시점 5·18 사진 게시	22건(1.8%)
5·18 당시 언론 비판	1건(0.1%)
기타	144건(11.5%)
합계	1,253건(100%)

△ 포털사이트 네이버 5·18 관련 보도의 내용별 건수와 비율(5/1~5/31) ©민주언론시민연합

내용에 따라 11개로 분류한 결과, 정치인의 5·18 행사 참석이 350건(27.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전후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캠페인 275건(21.9%),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159건(12.7%),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행보 90건(7.2%), 5·18부상자화공로자회와 시민사회 갈등 81건(6.5%) 등의 순서입니다. 포털뉴스 주요 내용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필수적인 진상규명과 증언, 기록에 관한 보도가 67건(5.3%)에 그친 것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기념식’에서도 ‘헌법수룩’에서도 여야 갈등에만 집중

분류	보도 건수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참석	91건(26.0%)
국민의힘 5·18 행사 참석	70건(20.0%)
더불어민주당 5·18 행사 참석	20건(5.7%)
여야 5·18 행사 참석	57건(16.3%)
기타	112건(32.0%)
합계	350건(100%)

△ ‘정치인 5·18 행사 참석’ 관련 보도의 세부내용별 건수와 비율(5/1~5/31) ©민주언론시민연합

5·18 관련 보도 중 가장 많은 ‘정치인 5·18 행사 참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참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5·18 행사 참석 등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식을 전할 때는 ‘호남 구애’, ‘서진정책’, ‘외연 확장’, 더불어민주당 소식을 전할 때는 ‘뒷발 다지기’, 여야 공통 소식을 전할 때는 ‘충출동’, ‘충집결’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은 뒤로 한 채 선거전략을 일컫는 용어로 보도하며 여야 경쟁을 강조한 것입니다.

분류	보도 건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취지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촉구	79건(49.7%)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여야 갈등	80건(50.3%)
합계	159건(100%)

△ ‘정치인 5·18 행사 참석’ 관련 보도의 세부내용별 건수와 비율(5/1~5/31) ©민주언론시민연합

5·18민주화운동 보도 중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한 보도는 159건이나 됐지만, 헌법수룩 촉구와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만 집중했을 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려는 취지를 자세히 다룬 보도는 없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5·18 원포인트 개헌불씨는 이어지는데 현실은 찻잔 산중>(5월 16일 윤슬기 기자)에서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길 경우 5·18을 둘러싼 왜곡과 폄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도 전반은 여야 갈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시민사회 갈등, 해결보다 갈등 자체만 중계

분류	보도 건수
갈등 상황	67건(82.7%)
광주시의원 릴레이 발언	10건(12.3%)
5·18기념재단의 시민참여 공문화 제안	4건(4.9%)
합계	81건(100%)

△ ‘5·18부상자회·공로자회와 시민사회 갈등’ 관련 보도의 세부내용별 건수와 비율(5/1~5/31) ©민주언론시민연합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등 3단체는 2월 19일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서 ‘5·18 당시 계엄군 다수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공분을 샀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

며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선언의 골자”라고 설명한 뒤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3단체는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언론도 해당 사안을 81건이나 보도했지만 대다수는 갈등 상황을 중계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3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5월 11일에는 5·18의 현재와 미래에 주목한 **광주시의회 초선 의원 5명이 5·18 현안을 언급하고 질타**했지만 관련 보도는 10건뿐입니다.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5월 31일 **5·18기념재단이 5·18을 둘러싼 각종 문제의 시민참여 공론화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관련 보도는 4건뿐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갈등 해결보다 갈등 중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 폭주족 보도하며 제목에 ‘5·18’ ‘광주’ 언급

5·18민주화운동 보도 중 의아한 것이 바로 ‘이륜차 폭주족의 폭주예고와 경찰단속’ 28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폭주족들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오는 (5월) 17일 밤에 (광주 일대에서) ‘난폭 질주’를 예고하면서 경찰이 대비**”에 나섰고 이후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 전 심야 폭주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 ‘이륜차 폭주족’ 보도 제목에 ‘5·18’ ‘광주’ 포함한 언론

언론은 하나같이 보도 제목에 ‘5·18 전야’, ‘5·18 광주’, ‘5·18기념일’ 등을 포함해 폭주예고 및 경찰단속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KBC광주방송은 <정신 나간 5·18 폭주·광주 도심 무법질주 무더기 검거>(5월 18일 김효성 기자)에서 ‘정신 나간 5·18 폭주’를 제목에 포함했습니다. 5월 17일 광주 일대에서 폭주를 예고한 일당이 실제로 폭주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힌 사실은 5·18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제목에 손쉽게 ‘5·18’과 ‘광주’를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엄숙하고 경건한 5·18 추모 기간인 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은 자제해달라”며 폭주 행각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엄숙하고 경건하게 5·18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 3. 6~8월 포털뉴스 댓글 : 왜곡편향 댓글 많은 언론사 '조선일보'

#### 왜곡편향 댓글 중 가장 많은 주제 '지역 비하'

#### 3개월간 5·18민주화운동 보도 72건에 불과

6~8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기준 YTN, JTBC, KBS, SBS, MBC, 국민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등 상위 1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18 광주'와 '5·18 광주'로 검색한 뒤,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기사 872건을 분석했습니다. '5·18 광주'와 '5·18 광주'로 검색했을 때 나온 보도가 많았다고 해서 5·18 관련 보도가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도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구분	6월	7월	8월	합계
5·18민주화운동 관련	20건(17.9%)	29건(7.3%)	23건(6.3%)	72건(8.3%)
정치	30건(26.8%)	121건(30.5%)	41건(11.3%)	192건(22.0%)
사회	11건(9.8%)	48건(12.1%)	94건(25.9%)	153건(17.5%)
기상지진	-	64건(16.1%)	37건(10.2%)	101건(11.6%)
사건사고	-	30건(7.6%)	21건(5.8%)	51건(5.8%)
정유성 역사공원	-	-	67건(18.5%)	67건(7.7%)
기타	51건(45.5%)	26.4%)	80건(22.0%)	236건(27.1%)
합계	112건(100%)	397건(100%)	363건(100%)	872건(100%)

△ 포털사이트 네이버 5·18 관련 보도의 내용별 건수와 비율(6/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5·18민주화운동과 직접 관련된 보도는 72건뿐입니다. 5·18 진상규명과 증언, 기록에 관한 보도가 5월 한 달에만 67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보도량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 872건 중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치 기사 192건입니다. '5·18민주묘지 방문' 등 정치인 행보를 전하는 과정에서 '5·18'이나 '광주'가 단순 언급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 기상·지진, 사건·사고, 정유성 역사공원, 기타 등의 경우에도 보도에서 '5·18'이나 '광주'가 단순 언급된 것에 불과합니다.

구분	분석 기사	전체 댓글	상위 20개 댓글	상위 20개 댓글 중				
				문제 댓글	작성자 삭제	규정 미준수	클린봇 감지	문제없는 댓글
6월	112건	7,712개	1,005개	236개	158개	3개	42개	566개
7월	397건	30,239개	3,009개	172개	566개	11개	95개	2,165개
8월	363건	28,952개	2,581개	408개	437개	24개	77개	1,635개
합계	872건	66,903개	6,595개	816개	1,161개	38개	214개	4,366개

△ 5·18민주화운동 관련 15개 언론사 포털뉴스 분석 현황(6/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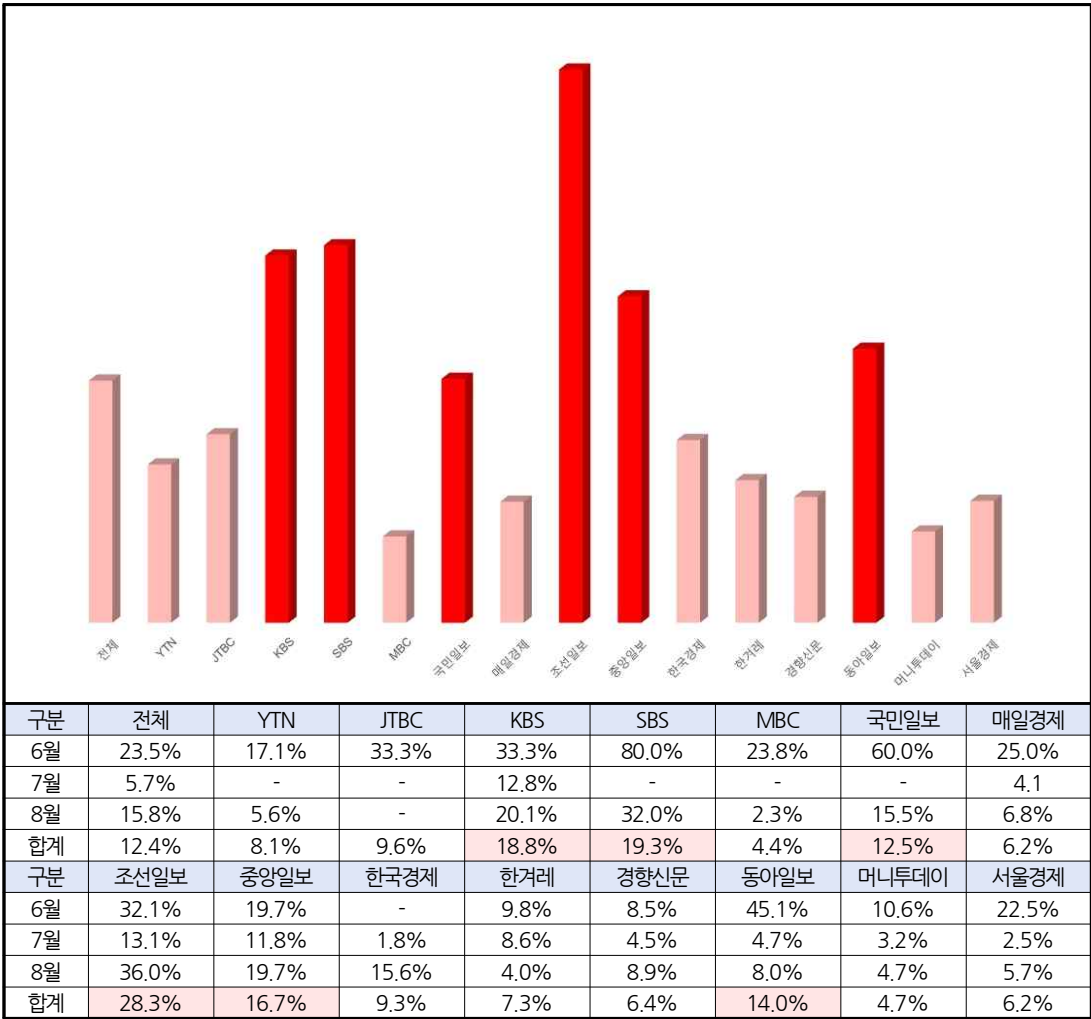
전체 기사 872건에 달린 댓글 전체 66,903개 중 가장 먼저 노출되는 상위 20개 댓글 6,595개도 분석했습니다. 댓글 정렬 기준에는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답글순, 과거순이 있고, 기준은 언론사가 결정합니다. 상당수 언론사는 상위 20개 댓글을 대개 '공감' 개수에서 '비공감' 개수를 뺀 '순공감순'으로 정렬하는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경향신문 46건, 국민일보 14건, 조선일보 13



건, 동아일보 9건이 댓글을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 조선일보, 왜곡편취 댓글 비율이 평균의 2배 넘어

분석대상 댓글 6,595개 중 왜곡편취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은 816개인데요. 언론사별 전체 댓글 대비 5·18민주화운동 왜곡편취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의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조선일보가 전체 댓글 중 왜곡편취 댓글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SBS(19.3%), KBS(18.8%), 중앙일보(16.7%), 동아일보(14.0%), 국민일보(12.5%) 등의 순서입니다. 15개 언론사 전체 댓글 중 왜곡편취 댓글 평균 비율이 12.4%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6개 언론사는 왜곡편취 댓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특히 조선일보의 왜곡편취 댓글 비율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6~8월 월별 비율로 비교해도 평균 비율을 크게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5개 언론사별 전체 댓글 대비 5·18 왜곡편취 댓글 비율(6/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 왜곡평행 댓글 '지역 비하' 51.7% 압도적

구분	6월	7월	8월	합계
북한군 개입설	7회(2.5%)	-	15회(3.1%)	22회(2.3%)
폭동설	30회(10.9%)	9회(5.0%)	28회(5.7%)	67회(7.1%)
군 자위권 행사 주장	7회(2.5%)	2회(1.1%)	5회(1.0%)	14회(1.5%)
헬기 사격 관련	-	-	-	-
가짜 유공자설	73회(26.4%)	38회(21.1%)	28회(5.7%)	139회(14.7%)
지역 비하	55회(19.9%)	108회(60.0%)	325회(66.6%)	488회(51.7%)
기타	104회(37.7%)	23회(12.8%)	87회(17.8%)	214회(22.7%)
합계	276회(100%)	180회(100%)	488회(100%)	944회(100%)

△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털뉴스 댓글의 왜곡평행 표현 등장 횟수와 비율(6/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문제 댓글 816개는 주제별로 분석했습니다. 댓글에 자주 언급되는 왜곡평행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각 댓글에 등장하는 문제 표현을 최대 3개까지 분류했는데요. 문제 표현 분류는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군 자위권 행사 주장 △헬기 사격 관련 △가짜 유공자설 △지역 비하 △기타입니다. 왜곡평행 표현 등장 횟수는 총 944회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지역 비하 488회(51.7%)이고 기타 214회(22.7%), 가짜 유공자설 139회(14.7%), 폭동설 67회(7.1%), 북한군 개입설 22회(2.3%), 군 자위권 행사 주장 14회(1.5%)순입니다. 헬기 사격 관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18 왜곡평행 댓글 중 매년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짜 유공자설보다 지역 비하가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이 눈에 띕니다. 7월에는 기상상황과 지진에 대해서 알리는 '기상지진' 관련 보도에서 지역 비하 댓글이 23차례나 등장했습니다. '호남지역 집중호우'와 7월 29일 전북 장수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보도에 "전라도는 당해도 싸다. 공산당 동네 아니냐??", "깜짝이야.. 우리나라인줄...", "간첩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지역이다. 저기가 우리나라 맞나? 사람이 사는지역이냐구요?", "이래서 전라도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구나" 등 맹목적인 지역 비하 댓글이 달린 것입니다.

8월에는 정유성 역사공원 관련 보도에서 지역 비하 댓글이 257차례나 등장했습니다. 8월 지역 비하 댓글 전체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공산당을 추모하는 것이 광주에 정신인가요", "광주는 무슨 공산세력과 반역의 성지냐? 적의 영웅을 굳이 우리 영웅들은 제치고 기념하는 정이 뭐냐?", "광주는 역시 붉은 물이 들었구나", "광주는 조금 있으면 김일성 거리도 조성할 기세" 등과 같이 철 지난 색깔론을 담은 지역 비하 표현이 다수입니다.

## 왜곡평행 없는 댓글 4,366개, '정치인 비판'과 '상대 진영 혐오' 55%

구분	6월	7월	8월	합계
정치인 비판	252개(44.5%)	1,067개(49.3%)	487개(22.5%)	1,806개(41.4%)
정치인 지지	11개(1.9%)	86개(4.0%)	36개(1.7%)	133개(3.0%)
상대 진영 혐오	-	281개(13.0%)	314개(14.5%)	595개(13.6%)
518 국가폭력 비판, 오월정신 추모 등 518 관련	74개(13.1%)	2개(0.1%)	-	76개(1.7%)
기타	229개(40.5%)	729개(33.7%)	798개(36.9%)	1,756개(40.2%)
합계	566개(100%)	2,165개(100%)	1,635개(100%)	4,366개(100%)

△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털뉴스 댓글 중 왜곡평행 표현 없는 댓글의 내용별 분류와 비율(6/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댓글 6,595개 중 왜곡편향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은 816개,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 1,161개, 운영규정 미준수로 삭제된 댓글 38개, 네이버 AI클린봇이 불쾌한 욕설을 자동 감지해 숨긴 댓글 214개, 왜곡편향 표현이 나오지 않은 댓글은 4,366개입니다. 5·18 왜곡혐오 댓글보다 그렇지 않은 댓글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인 비판이 1,806개(4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치성향이 다른 상대 진영을 혐오하는 내용이 595개(13.6%)로 ‘기타’ 다음으로 많았으며, 5·18민주화운동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을 비판하고 오월정신을 추모하는 등의 5·18 관련 댓글은 76개(1.7%)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 4. 제언

### 네이버 댓글 2.0%만 삭제, 5·18 문제 댓글에 적극 조치해야

네이버는 <2023년, ‘온라인 혐오 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3월 30일)에서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합리적 근거 없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을 조장하거나 배척하는 내용들이 증가하면서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2023년 한 해,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혐오·비하·차별 표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고한 5·18 왜곡편향 댓글에 대한 네이버 조치 결과는 네이버의 의지 표명에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구분	규정 미준수	작성자 삭제	조치 없음	합계
6월	-	5개(2.1%)	231개(97.9%)	236개(100%)
7월	6개(3.5%)	4개(2.3%)	162개(94.2%)	172개(100%)
8월	10개(2.5%)	5개(1.2%)	393개(96.3%)	408개(100%)
합계	16개(2.0%)	14개(1.7%)	786개(96.3%)	816개(100%)

△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표현 포털뉴스 댓글에 대한 네이버 조치 결과와 비율(6/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5·18 왜곡편향 모니터링의 분석대상인 포털뉴스 댓글 6,595개 중 왜곡편향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은 816개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문제 댓글을 네이버에 신고했습니다. 문제 댓글에 대한 네이버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sup>1)</sup>,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댓글이 787개(96.3%)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규정 미준수로 삭제된 댓글 16개(2.0%),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 14개(1.7%)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2년 네이버에 신고한 문제 댓글 1,718건에 대한 네이버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댓글이 1,609건(9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규정 미준수로 삭제된 댓글 24개(1.4%),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 85개(4.9%)였는데요. 즉, 네이버가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직접 삭제 조치한 문제 댓글이 2022년 1.4%, 2023년에도 2.0%로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이버는 2019년 개발한 악성댓글 탐지 ‘AI클린봇’이 “문맥의 맥락으로 욕설과 저속한 표현 뿐

1) 2023년 11월 23일 기준

아니라, 선정적·폭력적·차별적·비하적 표현을 유형화”하고 “스스로 학습, 탐지, 필터링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며 “매년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했다고 자신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네이버에 신고한 5·18 왜곡·편향 댓글 중 AI클린봇의 감지로 차단된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버는 “혐오 표현과 관련한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한층 강화된 정책을 적용해 제한할 경우 자칫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고한 문제 댓글에 대한 네이버의 삭제 조치는 2022년 1.4%, 2023년 2.0%에 불과합니다. 네이버가 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에 ‘조심스러운 접근’ 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역시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시민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창구는 주로 포털과 같은 검색 엔진 및 뉴스 수집 서비스(66%)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주로 뉴스를 소비하는 창구인 포털 뉴스에서 왜곡과 편향을 담은 댓글이 여론을 왜곡하고 혐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넷 트렌드의 데이터를 근거로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점유율이 가장 높은 포털사이트는 네이버(58.03%)입니다. 네이버가 온라인 혐오 표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진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언론사의 5·18 왜곡·편향 보도 근절해야

2023년 6~8월 언론사별 전체 댓글 대비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표현이 나온 문제 댓글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조선일보가 전체 댓글 중 왜곡·편향 댓글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선일보의 왜곡·편향 댓글 비율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6~8월 월별 비율로 비교해도 평균 비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8월 22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정율성의 이력 일부를 거론하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이른바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조선일보 <4·19, 5·18단체도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일간지에 공동광고>(8월 28일 노석조 기자)는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 광고 게재를 전하며,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일보는 <“정율성 공원 조성은 5·18 정신 먹칠” 호남 지식인들도 반발>, <“민족상잔 원흉 정율성 공원 철회하라” 광주 학생단체 성명>, <“정율성 기념관과 음악제 철회하라”… 학수호·호남대안포럼 공동 촉구> 등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에 반대하는 호남 기반의 각종 단체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정율성 공원 반대’ 광고의 5·18단체 이름 게재는 국가보훈부 요구에 따른 것이며 5·18단체 회원들이 반발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광주 지역 92개 시민단체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8월에는 정율성 역사공원 관련 보도에

서 5·18 왜곡·편향 댓글 중 지역 비하 댓글 257개, 5·18 왜곡·편향 댓글은 아니지만 상대 진영 혐오와 정치인 비판을 담은 댓글 대부분이 등장했는데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가보훈부 장관과 대통령의 ‘정율성 역사공원’ 정쟁화에 보수언론까지 합세하면서 호남지역 비하와 상대 진영 혐오를 담은 댓글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포털뉴스 댓글로 인해 5·18에 대한 왜곡·편향이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언론의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도 5·18에 대한 인식과 여론을 왜곡하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5·18 보도 5월에만 반짝 등장 안 돼…오월정신 계승보도 꾸준히 이어져야

KBS광주는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영상채록 5·18’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18을 직접 겪은 세대의 증언뿐만 아니라 5·18 이후 세대들이 말하는 5·18까지 담아내고 있는데요. <영상채록 5·18/20살 때 행방불명 이재몽…차초강 씨는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7월 6일 유승용 기자)에는 “내년 5·18날에 올려야 하는 기사를 오늘 올리는 거 보니까 전라도 시민들에게 감성팔이로 호소해보려고 하는 거 다 보인다”는 문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5·18은 5월에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와 전라도 시민에게 호소할 때 쓰이는 감성팔이 소재도 아닙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선 많은 분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전국에서 오월정신을 기리고 있죠. 따라서 5·18 보도를 “내년 5·18에 올려야 하는 기사”, “전라도 시민들에게 감성팔이로 호소해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그릇된 인식입니다.

그릇된 인식은 언론 보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상당수 언론의 5·18 보도는 5월에 집중돼 있는데요.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전후로만 반짝 나오는 5·18 보도는 ‘5·18은 5월에 언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굳힐 우려가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막고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5·18민주화운동 보도가 중요합니다.





## 발제

### 유튜브 5·18 왜곡·폄훼 콘텐츠 확산 실태와 문제 -유튜브 모니터링 2022년과 2023년 결과 비교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 1. 2023년 5·18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

##### 2023년 유튜브 왜곡·폄훼 표현 모니터링 개괄

2015년부터 5·18기념재단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2년 포털뉴스 댓글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5·18 왜곡·폄훼 표현을 감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에도 포털뉴스 및 유튜브 영상 모니터링과 댓글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유튜브 영상의 경우 ‘5·18 광주’, ‘5·18 광주’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댓글(답글 포함)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뒤, ‘좋아요 50회’ 이상 받은 댓글과 해당 댓글이 달린 영상을 위주로 모니터링 했습니다. ‘50회’는 유튜브 채널 관리대행업체 대다수가 정하고 있는 댓글 상단 노출을 위한 최소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관리대행업체는 구독자 늘리기, 조회 수 늘리기, 영상 좋아요 늘리기, 댓글 좋아요 늘리기 등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데, ‘좋아요’가 많은 댓글일수록 목록 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 서비스 제공 최소기준이 ‘좋아요 50개’인 것입니다.

	모니터링 댓글 수 <sup>1)</sup>	모니터링 영상 수 <sup>2)</sup>	왜곡·폄훼 표현 등장 횟수	등장 1위 표현
5월	1,195개	50개	426회 (문제 댓글 406개)	기타(203회·장세동 찬양 55회) 가짜유공자설(180회)
6월	383개	13개	364회 (문제 댓글 300개)	가짜유공자설(210회)
7월	90개	2개	96회 (문제 댓글 90개)	기타(80회·조우석 응원 32회) 가짜유공자설(8회)
8월	356개	12개	34회 (문제 댓글 31개)	지역비하(17회)
합계	2,024개	77개	920회	-

△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유튜브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표현 모니터링 결과(5/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5~8월 4개월 간 실제 모니터링 대상이 된 댓글 수와 영상 수, 댓글에서의 왜곡·편향 표현 등장 횟수, 매달 등장 1위 표현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개월 간 모니터링한 유튜브 댓글 수는 총 2,024개였고 유튜브 영상 수는 77개였습니다. 댓글 2,024개 중 827개(40.9%)에서 왜곡·편향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고 표현 횟수로 분류해보니 920회였습니다.

또한 민언련은 유튜브 영상 및 댓글 모니터링 후 왜곡·편향 표현이 포함된 경우 영상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를 제출했습니다. 댓글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신고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제출한 건수는 22건이었고, 유튜브 댓글을 유튜브 플랫폼에 신고한 경우는 807건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신고	유튜브 영상 방심위 심의 제출	유튜브 댓글 신고
5월	11건	11건	391건
6월	8건	8건	296건
7월	2건	2건	89건
8월	1건	1건	31건
합계	22건	22건	807건

△ 민주언론시민연합의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표현 대응 처리 건수(5/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 특징① ‘가짜 유공자’ 보도에 ‘가짜 유공자설’ 댓글 늘어

2023년 모니터링 결과, 유튜브 댓글과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언론 보도’와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가짜 유공자설’은 모니터링 기간 등장하는 왜곡·편향 1위 표현으로 자주 오를 만큼 시기를 가리지 않는 대표적 5·18 왜곡·편향 표현입니다.

그중에서도 5월 유튜브 댓글에서 180회까지나 등장한 것은 언론 보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스카이데일리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단독/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5월 18일 특별취재팀 기자)이라는 보도를 내놓자 가짜 유공자설 댓글 등장 횟수는 확연히 늘었습니다. 보도 이전 가짜 유공자설의 댓글 등장 횟수는 39회였으나, 보도 이후 등장 횟수는 141회나 되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순 문제 댓글 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 소재로도 사용되면서 이른바 ‘에코 챔버(echo chamber·반향실 효과)’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에코 챔버 현상이란 알고리즘 등과 같이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서 이용자는 자신과 입장이 같거나 비슷한 정보만 되풀이해서 수용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 집단의 극단화·동질화를 만들게 되며 극단적으로는 한 명이 퍼트린 정보가 계속해서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5월 ‘뉴스닷’ <5·18 유공자 명단 입수해 분석해보니……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인싸it’ <[LIVE] 광주 5·18 희생자는 있었다 그러나 유공자는 뭘하고 유공자가 되었을까? | 230518 인싸it> 등의 유튜브에서 인용되며 대표적인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표현인 가

1) 좋아요 50개 이상  
2) 좋아요 50개 이상을 받은 댓글이 달린 영상

짜 유공자설을 반복·강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히 보도된 시점에 회자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유튜브 영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최병목의 FACT’, ‘성창경TV’, ‘아시아투데이’, ‘신의한수’ 등이 인용했으며 ‘신의 한수’를 제외하고는 언론인 출신이거나 언론사 유튜브입니다. 최병목 씨는 월간조선, 성창경 씨는 KBS 출신이며 ‘아시아투데이’는 2005년 온라인신문으로 시작한 종합일간지로 해당 유튜브에 등장한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은 지난 9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입당하여 청주시 흥덕구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짜	채널명	영상 제목
2023-05-18	뉴스닷	5·18 유공자 명단 입수해 분석해보니……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2023-05-18	인싸hit	[LIVE] 광주 5·18 희생자는 있었다 그러나 유공자는 뭘하고 유공자가 되었을까?   230518 인싸hit
2023-06-12	성창경TV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의 칼럼에 ‘63명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2023-06-02	성창경TV	스카이데일리, 5·18유공자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의혹 명단 발표
2023-06-12	아시아투데이	[5·18 가짜 유공자 의혹] 해도 해도 너무한 5·18 짝퉁 유공자
2023-06-07	최병목의 FACT	[최병목의 팩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 160명 가짜”
2023-06-26	신의한수	(라이브뉴스) 민주당 불륜 낙태 터졌다! 민주화운동 1만명 명단 충격! / 2023.06.26
2023-06-08	아시아투데이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5·18 유공자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 윤석열 동선에 박정희가 보인다 / 이재명이 사과 안 하는 진짜 이유_23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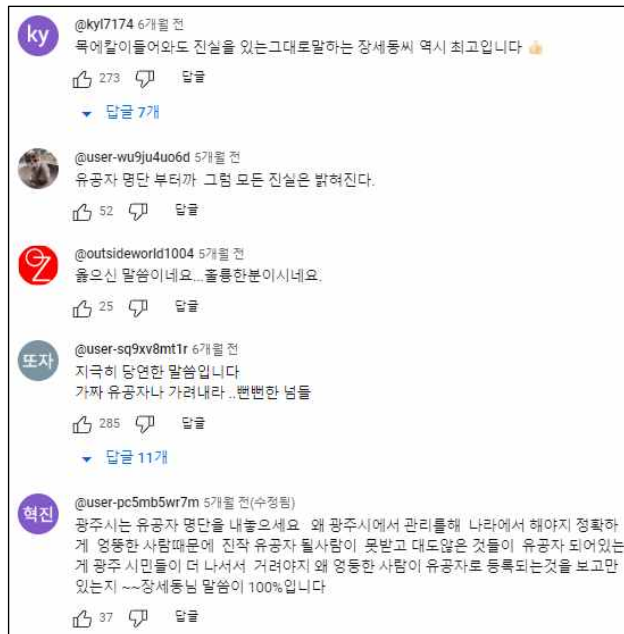
△ 모니터링 기간 스카이데일리 문제보도 인용한 유튜브 영상 목록(5/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 특징② 5·18 왜곡·편향 댓글, 보도 책임은 없는가?

5월 한 달 왜곡·편향 표현으로 가장 많은 203회나 등장한 것은 ‘기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살펴보니 5·18을 왜곡하고 편향하는 인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117회(57.6%)로 주를 이뤘습니다.

5·18 왜곡·편향 인사에 대한 찬양 중 특히 전두환 정권의 2인자라 불린 장세동 씨 찬양이 55회(27.1%)로 가장 많았는데요. 해당 댓글은 SBS 뉴스에서 올린 <‘2인자’ 장세동 “5·18, 사과할 필요도 할 것도 없다” / SBS / 1분핫뉴스 #shorts>(5월 16일)에 달린 것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죄한 데 대해, 장 씨가 한겨레와의 인터뷰 <[단독] “다 밝혀지게 돼 있다”…5·18 진실 묻자 장세동이 한 말>(5월 16일 정대하 기자)에서 “(전우원은) 5·18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며 “(5·18에 대해선) 사과할 필요도 할 것도 없다”고 밝힌 것을 49초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전한 것인데요. 해당 영상에는 “장세동 멋져”, “장세동 파이팅”, “장세동씨 훌륭하십니다 대통령 출마하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인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에칼이들어와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장세동씨 역시 최고입니다”, “진정한 사나이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등 장 씨 찬양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SBS 뉴스는 영상에서 장 씨가 “전두환 정권 당시 2인자”로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직책으로 광주에 방문했다”고 설명했지만, 장 씨 발언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언론은 5·18 관련 특정인사의 왜곡·편향 발언 등 망언 전달을 자제해야



△ 장세동 씨 관련 유튜브 쇼츠 하단 댓글(5/16) ©유튜브 캡처

하고, 혹여 문제 발언을 전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극우성향 유튜브 이용자들이 장 씨를 찬양하는 바탕을 만들어준 셈이 된 것입니다.

한편 같은 달 유튜브 댓글 모니터링 결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밝힌 전우원 씨 응원 댓글이 많았는데요. 좋아요 50회 이상 받은 댓글 1,195개 중 왜곡·편향 표현이 나오지 않은 댓글은 789개였고, 이중 전우원 씨 응원이 248개(3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우원 씨 사죄의 진정성을 높이 평

가하고 응원하는 댓글은 5월 19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 5·18 특별기획 ‘각하와 나-전우원, 전두환 일가의 검은돈을 말하다’에 125개로 가장 많이 달렸습니다. 해당 방송은 전우원 씨와 전우원 씨 어머니 최 씨와 함께 고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전우원 씨가 직접 내레이션을 했습니다. MBC <PD수첩>이 올린 5·18 유가족의 전우원 씨를 향한 당부 영상과 연합뉴스TV가 올린 전우원 씨 5·18 추모식 참석 영상에도 각 29개씩 적지 않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5·18 왜곡·편향 발언 등 망언 영상이 올라오면, 망언에 동조하거나 망언을 비판하거나 서로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댓글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전우원 씨가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새롭게 나타난 흐름이 있습니다. 전우원 씨 관련 영상에 전 씨 응원 댓글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댓글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 2. 모니터링 및 신고·심의 결과 비교

### 유튜브 왜곡·편향 표현 줄었다고 보기 어려워

2022년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포털 및 유튜브 모니터링을 진행해 5·18 왜곡·편향 표현 현황을 파악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및 심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가장 보편적이거나 문제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키워드 4개를 정해<sup>3)</sup> 매달 검색하여 나온 영상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7개월 간 모니터링한 유튜브 영상은 1,183개, 문제 표현을 발견한 유튜브 영상은 82개였습니다. 2023년 데이터 수집 방식과 달라 1대1 비교는 어렵지만 올해 문제 유튜브 영상 수는 77개를 발견해 기간은 짧지만 그 수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키워드는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 ‘광주 사태’, ‘광주 폭동’이며, 각 키워드를 검색하여 ‘1년 이내’에 업로드된 영상을 ‘날짜순’으로 정렬하여 해당 기간 나온 영상을 모두 살폈습니다.

	유튜브 모니터링 영상 개수	유튜브 문제 영상 개수	왜곡·편향 표현 등장 횟수	등장 1위 표현
4월	68개	10개	18회	북한군 개입설
5월	799개	34개	59회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6월	67개	13개	17회	폭동설
7월	37개	7개	9회	폭동설
8월	56개	7개	15회	북한군 개입설
9월	86개	5개	9회	기타(김대중이 광주사태를 일으켰다)
10월	70개	6개	11회	5·18역사왜곡처벌법 비하
합계	1,183개	82개	138회	-

△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모니터링 현황(2022/4/1~2022/10/31) ©민주언론시민연합

또한 작년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제출한 영상은 82건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22건으로 줄었습니다. 모니터링 범위의 차이(작년 1,183건·올해 77건)로 보이며, 모니터링한 영상 4건 중 1건은 신고하거나 심의를 넣었다는 점에서 왜곡·편향 표현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털 기사 하단 댓글 신고	유튜브 콘텐츠 신고	유튜브 방심위 심의 제출
4월	78건	9건	9건
5월	1,152건	34건	34건
6월	133건	15건	15건
7월	58건	6건	6건
8월	13건	7건	7건
9월	251건	5건	5건
10월	33건	6건	6건
합계	1,718건	82건	82건

△ 민주언론시민연합의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 표현 대응 처리 건수(2022/4/1~2022/10/31) ©민주언론시민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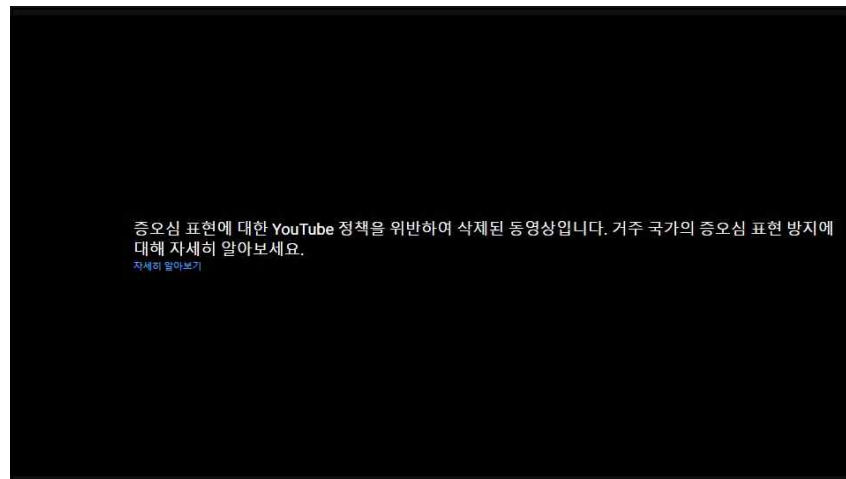
## 유튜브, 1개 삭제하고 나머지 그대로 게시

작년과 유튜브 플랫폼, 방심위의 대응을 비교해보니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식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플랫폼을 통해 신고한 유튜브 영상의 조치 결과를 살펴보니 올해 신고한 22개 영상 중 단 1건이 ‘삭제됨’ 처리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증오심 표현에 대한 YouTube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된 동영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정책’,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 등을 포함해 ‘증오심 표현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삭제된 영상은 <[조우석 평론가 특별 영상] 끝내 터진 충격 증언! 광주 5·18 총지휘는 100%

북한의 장난이다! - 2023.07.28.>(7월 28일)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극우인사 조우석 평론가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조우석 평론가는 오랜 기간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문화부 기자로 활동했지만, 공영방송 KBS 이사 재직 당시 언론인으로서 윤리의식을 저버린 채 술한 역사왜곡과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된 동영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유튜브 캡처

신고된 다른 영상이라고 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아닌 경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같은 달 신고한 <[U Korea TV-2] 5·18 유공자는 없다(김태산)>(7월 29일)는 5·18 왜곡편취 등 극우 성향의 극단적 콘텐츠가 다수 게시된 유튜브 채널 U Korea TV-2에 올라온 영상으로, 북한 경공업성 책임지도원 출신으로 체코 신발공장 지배인을 하기도 했다는 탈북자 김태산 씨가 가짜 유공자설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이유로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듯 유튜브는 신고 기록 페이지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상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처리 과정이나 근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신고 직후 이메일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이후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따로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 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경우 콘텐츠 삭제’, ‘일부 시청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한 적용’,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 유지’라는 안내만 할뿐입니다.

유튜브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를 가지고 신고 내역을 검토, 이후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외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신고 처리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채널이나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 유튜브에서 제재를 했는지, 한국 심의기구 방심위가 제재한 경우 유튜브에서 어떻게 협조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유튜브는 고객센터에서 “이미 신고가 접수된 동영상을 비롯하여 신고한 모든 동영상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이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에도 수정된 바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게시중	삭제됨	제한됨	합계
유튜브 신고 결과	2022	58건(79.5%)	4건(5.5%)	11건(15.1%)	73건
	2023	21건(95.5%)	1건(4.5%)	-	22건

△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표현 유튜브 조치 결과(2022/4/1~10/31, 2023/5/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한편 작년에는 신고한 73건의 영상 중 4건이 삭제, 11건이 제한된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의 유튜브 대응 결과는 다소 아쉽습니다. 유튜브는 게시중(실시간Live), 삭제됨(Removed), 제한됨(Restricted)이라는 세 가지 상태로 신고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시중(실시간)’은 ‘동영상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거나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삭제됨’은 ‘YouTube에서 삭제된 동영상입니다’, ‘제한됨’은 ‘연령 제한 또는 기능 제한 등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는 동영상입니다’란 의미입니다. 정확히 ‘제한됨’ 상태가 어떠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22건 중 21건이 모두 게시중이라는 점은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게 합니다.

유형	콘텐츠	신고 사유	상태
동영상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과 5·18 유공자 문제에 사죄하라 2023. 8. 25 #shorts 김경재방송	잘못된 정보 2023. 10. 19.	실시간
동영상	[U Korea TV-2] 5·18 유공자는 없다(김태산) U Korea TV-2	잘못된 정보 2023. 9. 15.	실시간
동영상	[조우석 평론가 특별 영상] 끝내 터진 충격 증언! 광주 5·18 총지휘는 100% 복한의 장난이다! 2023.07.28	잘못된 정보 2023. 9. 15.	삭제됨
동영상	이순자가 남편 대신 광주에 사과했다 결렸을 때 전두환의 반응 애국가 박정희 대통령	잘못된 정보 2023. 8. 16.	실시간
동영상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5·18 유공자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 윤석열 당선에 박정희가 보인다 / 이재명이 사과 안 하는 진짜 이유_230608 아루TV	잘못된 정보 2023. 8. 16.	실시간

△ 유튜브 신고 기록 페이지 ©유튜브 캡처

## 방심위, 결정 없는 ‘기간연장’ 계속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튜브 문제 영상이라고 판단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sup>4)</sup>에 통신심의의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22건의 통신심의 중 심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심의가 진행 중인 건이 16건으로 전체의 70%를 넘겼습니다.(11월 20일 기준)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음.

결정된 6건 중 2건은 ‘해당없음’ 결정을 받았고(9.1%) 4건이 접속차단 결정(18.2%)을 받았습니다. 접속차단 결정이 난 1건의 경우 유튜브에서도 ‘증오심 표현 정책 위반’이라고 밝힌 영상이었습니다.

연도	결정				진행 중			합계
	해당없음	접속차단	내용확인불가	각하(미유통)	처리중	기간연장	접수대기	
2022	43건(53.8%)	13건(16.3%)	2건(2.5%)	6건(7.5%)	5건(6.3%)	5건(6.3%)	6건(7.5%)	80건 (100%)
연도	결정				진행 중			합계
	해당없음	접속차단	내용확인불가	각하(미유통)	처리중	기간연장	접수대기	
2023	2건(9.1%)	4건(18.2%)	-	-	1건(4.5%)	15건(68.2%)	-	22건 (100%)

△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표현 방심위 심의 제출 결과(2022/4/1~10/31, 2023/5/1~8/31) ©민주언론시민연합

나머지 3건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접속차단이 무용지물 조치가 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인터넷 망의 환경이나 보안프로토콜 등에 따라 접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접속차단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상황으로 위원회 또한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sup>5)</sup>

특히 3건 모두에 대해 방심위는 “해당 정보는 국외에 서버를 두고 제공되는 정보로 확인되어, 접속차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유튜브 계정이 국외에 IP주소를 두고 만들어졌다는 의미인지, 유튜브는 그 자체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 유튜브 콘텐츠가 심의에 올라오면 무조건 접속차단 결정을 하는 것인지, 방심위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튜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접속차단 결정을 했다면, 다른 유튜브 영상의 경우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데 반해, 또는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데 반해 해당 3개 영상에 대해서만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도 방심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심위는 ‘현행법상 해외 서버에 있는 정보의 경우 직접 관리·감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접속차단으로 제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이미 국내에서 유튜브를 통해 정보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모두가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하더라도 해당 3개 영상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통해 관리·감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작년과 달리 ‘기간연장’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작년엔 9월, 10월, 11월까지 통신심의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2년 9월 27일에 민원접수한 5건은 ‘기간연장’, 2022년 10월 11일에 민원접수한 5건은 ‘처리중’, 2022년 11월 3일에 민원접수한 6건은 ‘접수대기’ 상태인 것으로 당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7월 24일에 민원접수한 6건, 8월 11일에 민원접수한 8건, 9월 15일에 민원접수한 1건 모두 기간연장만 계속 하고 있을 뿐, 방심위가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심위에 제기하는 민원의 경우 처리 기한과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심의대상 정보로서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처음 심의 신

5) 2022년 발제 당시 답변 받은 사항

청 이후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와 그 사유를 알리라는 권고사항일 뿐, 언제까지 민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앞서 제출한 심의 14건의 경우에는 2차 기간연장 중에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편향표현 영상 관련 통신심의에서 심의 후 시정요구(접속차단)가 나온 비율이 20.3%로, 당시 비교자료인 2021년 ‘유해정보’<sup>6)</sup> 심의 결과에서 나온 시정요구보다 높은 비율<sup>7)</sup>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한 ‘2022 방송통신심의 연감’에 따르면 ‘유해정보’ 심의에서 2022년 전체 5,451건을 심의하여 그 중 2,300건에 시정요구를 결정해 그 비율이 42.2%에 달했습니다. 2021년 14.5%에 비해 27.7%p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출하여 결과가 나온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편향표현 영상 관련 통신심의에서 시정요구(접속차단)가 나온 비율은 6건 중 4건으로 66.7%에 달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출한 심의에서 시정요구가 나온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아직 대부분이 ‘기간연장’으로 어떤 심의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심의 대비 시정요구 비율은 9.9%였습니다(전체 심의 9,915건 중 978건).

구분	심의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정지)	계
2020년	9,915	805(82.3)	146(14.9)	27(2.8)	978(100)
2021년	4,599	410(61.4)	254(38.0)	4(0.6)	668(100)
2022년	5,451	1,729(75.2)	34(1.5)	537(23.3)	2,300(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 등 심의의결 현황 ©2021~2022 방송통신심의 연감 (단위: 건, %)

한편 ‘해당없음’으로 결정된 2건의 경우 1건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JBC뉴스의 <전광훈 “5·18 북한개입설, 나를 체포하라, 광주경찰서 출두거부”——보수궤멸을 박근혜 탓으로 돌린 홍준표>(5월 15일)가 그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JBC뉴스)가 게시한 내용으로,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소관임을 안내드립니다”라며 “이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1건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사유 등을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세부답변에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신고된 내용만으로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판단·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유와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일일이 열람해야 합니다.

6) 일반 사이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폭력·잔혹·혐오성 정보,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서 제공되는 불법·유해정보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1년 전체 유해정보 등에 대해 4,599건을 심의하여 그 중 668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는 14.5%의 비율이다.

### 3. 제언

#### 유튜브 자율규제, 어떻게 이끌 것인가

유튜브는 이미 한국에서 뉴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9월 22일 발행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3 한국>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2명 중 1명(53%)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9%p 증가한 수치이며, 46개 조사대상국 평균(30%)보다도 23%p나 높은 결과입니다. 뉴스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이용시간이 가장 긴 앱이기도 합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11월 15일 발표) 유튜브 앱의 지난 10월 사용시간이 1,044억 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위인 카카오톡(319억 분)보다 3배, 네이버(222억 분)보다 5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사용시간의 증가감소 폭 모두 크지 않았던 반면, 유튜브 앱 사용시간은 2020년 10월 671억 분에서 2023년 10월 1,044억 분으로 증가해 3년 간 1.6배 늘었습니다.

유튜브는 수익과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에 기반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인데다 사회적 영향력도 큰 만큼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로서는 자율규제가 유일합니다. 해외 미디어플랫폼 기업으로 어떠한 윤리적 규제 체계에도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체 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심의의 제대로 된 실행이 중요할 것입니다.



△ 영상 아래 나타나는 위키피디아 ‘5·18민주화운동’ 설명

다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상 아래 위키피디아 설명이 띄워져 있으나 왜곡편향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능의 한계를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규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사업자,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지는 ‘협력적 자율규제’ 등의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글코리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미가입한 상태로, 인터넷 사

한편 유튜브는 2018년 3월, 일명 ‘정보 단서들(information cues)’이라는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영상에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 정보 링크를 추가하여 이용자가 문제 동영상을 보더라도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두는 기능입니다. 유튜브가 위키피디아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 위키피디아 또한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 유튜브가 뉴스 수용자를 원하지만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업자 간 규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아 최소한의 조치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서비스에서의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지난 8월 ‘한국판 DSA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8월 유럽연합이 마련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sup>8)</sup>을 참고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DSA법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절차적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관련 허위·불법 콘텐츠 단속을 위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 엑스(X·옛 트위터)와 메타, 틱톡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틱톡과 유튜브를 상대로도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있어 국내에 새로운 규제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심의제도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제도의 경우, 최근 ‘뉴스타파 인용보도’ 사례를 통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왜곡·편향 표현이나 혐오표현 등에 대해서는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통신심의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통신심의 결과의 불명확성이나, 기간연장으로 제때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한 점 등은 미비한 법적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도언론 보도 영향력 간과해선 안 돼

한편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왜곡·편향 표현 댓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터넷언론 기사와 SBS 유튜브 영상 내용이 꼽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 등 전통매체가 미디어 및 뉴스 이용률에서 약세를 보인 것에 반해, 뉴스 미디어 유형별 신뢰도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 뉴스 및 시사정보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텔레비전의 신뢰도가 5점 만점에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이신문과 인터넷 포털이 각각 3.36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2.81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제도언론으로 인식하고 신뢰하는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에서 5·18을 비롯한 역사 왜곡·편향 사례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정보 신뢰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생각할 때, 언론 보도에 대한 감시 또한 느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 규제 대상 기업이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문제 콘텐츠에 대해 분석한 뒤 완화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의 경우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구글(검색·유튜브·쇼핑·구글플레이),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애플(앱스토어), 아마존 등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 명 이상(EU 역내 인구의 10% 이상)인 19곳 등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토론

### 5·18민주화운동 부정왜곡 지속 문제 대응

### -5·18민주화운동의 '정치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기

김윤철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1. 포털 뉴스-유튜브 콘텐츠-댓글들이 부정·왜곡의 유포처임을 부인할 수 없음. 하지만 (어떻게) 근절·극복할 수 있을까?
    - 1) 오월정신 계승보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누가, 어떻게? 대항 포털과 유튜브 콘텐츠? 방송사의 (민주)시민자산화?
    - 2)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심의제도 필요성 동의. 제도언론 보도 영향력 간과하면 안된다는 것 역시 동의. 하지만 심의제도는 어떻게 조성할 수 있으며, 제도언론 보도의 영향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을까? 좋은 정치세력의 집권과 정권의 지속? 시민감시의 지속과 강화? 5·18특별법으로?
    - 3) 매년 별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부정·왜곡이 이루어지는 보다 구조적인 이유를 찾아 대처해야 함.
  2.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과 왜곡의 지속 이유를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제적 조치를 넘어서서 정치구조(정치균열구조와 정당체제) 차원에서의 조망도 필요함. 1-2), 2)를 총괄해 지속 실천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정치
    - 1) 법제적 조치는 기본적으로 부정과 왜곡 행위를 특정 집단과 개인의 일탈이라고 가정함. 하지만 단지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지속 반복 현상은 기본적으로 구조 차원의 문제. 구

조를 없애지 않으면, 특정인을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다른 이들에 의해- 부정과 왜곡은 다시 나타날 것임.

2) 5·18민주화운동은 민주-반민주 균열, 진보-보수 균열, 지역균열 등과 연결-연관되어있음. 바로 여기에 그러한 균열의 역사적 작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구조(정당체제) 하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이유가 있음. 즉, 5·18민주화운동의 부정과 왜곡은 민주-반민주 균열, 진보-보수 균열, 지역균열의 역사적-중첩적 작동의 과정과 그것을 작동시키는 구조인 '유사 진보-보수' 양당우위체제에 바탕해 지속되어왔음.

3) 유사 진보-보수 양당우위체제는 5·18민주화운동의 발전적 계승을 제약하고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임. 즉, 정략적으로 사용케 만드는 구조임.

(1) 진보라고 불리우는 정당(더불어민주당)마저도 노동약자 등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 진보의 핵심 가치이자 사회적 기반인 평등과 노동에 대해 적대적(비우호적)일 때도 있음. 보수로 불리우는 정당(국민의힘)은 그 수준과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비타협적임. 특히 민주화 이전의 낡은 지배이데올로기, 반공주의, 성장주의, 지역주의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음.

: 언론이 5·18을 5월에만 다루면서도 정쟁 중심으로 다루고, 부정 왜곡 콘텐츠와 댓글 중 지역 비하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임

(2) 유사 진보-보수 양당우위체제의 주요 정당들은 민주화 이후의 역사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과거화-형식화(민주-반민주 균열의 조기 해소), 지역화-고립화(지역균열의 장악과 변용), 추상화-정파화(보수-진보 균열의 제약과 변형적 동원) 했음.

: 과거화되고 형식화된 사건에 대한 부정과 왜곡은 상대적으로 용이. 현실과 분리되어 있기에 그 민감 반응 부위의 폭이 썩 넓지 않고, 그 표출의 성격도 규범적-원칙적, 추상적일 공산이 크기 때문.

: 지역균열의 동원은 호남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켰음. 동시에 '장소성'의 측면에서 광주-호남을 표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5·18민주화운동은 지역화 되었음. 5·18민주화운동의 지역화는 사회적 기반의 약화 혹은 확장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부정과 왜곡의 가능성을 높임.

: 보수-진보 균열의 제약과 변형적 동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양당 경쟁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 동원하는 '상징 자원' 정도로 간주되게 함. 586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임. 또 호남지역 지지를 얻기 위해 성대한 기념식

을 열어 참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임.

3.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혹은 그것의 여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화-형식화-지역화-고립화-추상화-정파화’를 조장하는 정치구조와 그것의 작동 방식을 재구성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실질화’해야 함. 즉,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의미(특히 공동체와 민중이라는 요소)를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의 투입과 산출로 연결해야 함. 또 그것을 주도하는 정치·사회적 집단이 등장해야 함.



## 토론

### 포털뉴스 댓글의 왜곡평화와 언론의 책임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 기자

---

민언련에서 작업한 모니터링 내용을 잘 봤습니다. 일부 극우인사들과 그들의 발언을 공론화해주는 언론, 그리고 맹목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도와 댓글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전에는 노조협회를 주제로 ‘노동조합’에 대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유사한 작업 진행하며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작업한 내용을 간략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지난 1년간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기사 5만 3천여 건과 댓글 230여만 건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기사는 모두 53,131건(기간: 2022년 10월 29일 ~ 2023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부터 3일 동안 7,169건, 11월 한 달 동안에는 25,225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사 수는 12월에 7,683건으로 줄었고, 2023년 3월부터는 1천 건대로 줄었습니다.

참사 직후 3일간은 참사 원인, 피해 및 대응 상황, 참사 경위 등을 다룬 ‘사회’ 분야 기사가 주를 이뤘던 반면 기사 본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명과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이 언급된 ‘정치’ 분야 기사는 14.4%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로는 ‘정치’분야 기사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11월에는 39.4%, 12월에는 55.2%로 늘었고, 전 기간에 걸쳐서 40% 이상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으로 소비되었던 경향을 시사하는 사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 논쟁으로 보도되는 기사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을 언급하는 기사는 정치 분야 기사의 수보다 적어졌습니다. ‘유족’, ‘유가족’, ‘유가족협의회’ 등 유족 관련 키워드가 등장한 기사를 따로 뽑아 집계한 결과, 유족 언급 기사가 정치 분야 기사보다 많았던 달은 2022년 10월(유족 언급 기사 2,595건, 정치 분야 기사 1,035건)과 2023년 3월(유족 언급 기사 382건, 정치 분야 기사 308건) 두 달뿐이었습니다.

정치 분야 기사가 증가한 것은 국정조사 등 참사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이런 경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사 초기에는 사고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또는 비하 댓글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여야 지지층의 대립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특정 지역 비하 발언도 더해졌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간부 등을 언급하며 비판 댓글을 달았으며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북한, 민노총, 전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비판 댓글을 달았다.

뉴스타파가 수집한 230만 건의 댓글 전체를 스마일게이트의 ‘Unsmile’ 데이터셋과 Bert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 댓글 중 약 30%가 악의적 평가나 혐오성 댓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조사대상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노조혐오 분석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을 다룬 22개 일간지의 사설 3,377건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뉴스 빅카인즈 시스템에서 추출한 키워드 정보를 이용해 두 단어가 사설에서 연달아 등장한 경우에 1점을 주는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분석 결과 ‘노조’는 ‘파업’과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는 대체로 ‘강성’, ‘귀족’, ‘기득권’, ‘불법’ 등의 부정적인 단어와 연달아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언론사 사설에서 기업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노조를 표현하는 단어들과 뚜렷하게 대조됐습니다. ‘기업’은 ‘투자’와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3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언론사 사설에서 기업은 ‘투자’하고,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로 묘사됐습니다. 또 기업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민언련의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와 논의는 제가 두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과도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무엇보다도 사안을 정치적 대립구도로 쉽게 표현하는 언론사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행정력이 부재해 만들어진 참사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 사실이 확고하게 확립돼 있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이 정치쟁점화하고, 대립구도를 언론사들이 부추기면서 양당 지지자들의 대립구도가 댓글창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댓글창이 우리 사회 공론장으로써 유효한 공간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민언련이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악성댓글 비율이 20~30%가 됐고, 제가 분석한 이태원 참사 댓글에서도 악성댓글 비율은 30% 정도입니다. 이 비율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참사 초기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댓글, 행정당국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 등이 많았고, 사안이 정치쟁점화한 뒤에는 빠르게 양당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댓글로 이어졌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혐오댓글도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태원참사 관련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는 경찰 수사 43건, 검찰 송치 17건, 삭제/차단 요청 게시글은 584건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염돼 ‘혐오발전소’로밖에 기능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이런 공간이 정말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그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토론

### 5·18 왜곡·편향·표현 사법적 대응 촉구

####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했고, 그때 약간 긴 토론문을 통해 인터넷에 나타나는 5·18 혐오·왜곡·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토론자로서는 지난해 토론에서 제기했던 주요 쟁점과 다른 새로운 큰 이슈는 없다.

발제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모니터링 현황과 경향성, 그리고 문제되는 5·18에 대한 혐오·왜곡·표현의 지속적인 처리 내용 및 관계 당국이나 기업의 반응 등 지난해의 주제에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 역시 특별히 새로운 관점을 언급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니터링 작업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주제와 관련 올해 달라진 상황적 맥락을 짚어보고, 그것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 지난해 토론 요지

지난해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기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해 토론했던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18특별법(2021.1.5. 개정, 법률 제17823호) 개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5·18관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왜곡과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핵심이다.

둘째, 5·18왜곡은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소환하는 2차 가해’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언급했다.

셋째, 5·18이후 출생한 세대가 우리 사회 인구구성에서 중장년층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이 생활 그 자체인 세대이다. 이들에게는 5·18세대의 시대정신이었던 ‘민주화’ 담론이 ‘민주화 세력 = 기득권 세력’ 담론으로 치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민주화세대의 사회개혁 부진에서 오는 실망감이 ‘민주화 = 무능, 혹은 기득권’ 프레임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MZ세대의 경우 이런 정서적 바탕에서 ‘5·18 = 민주화 = 기득권’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인터넷상에서 무비판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넷째, 극우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SNS에서 5·18북한군침투설, 5·18가짜유공자설 등은 자극적인 요소를 갖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다섯째, 여기에도 지역적,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지형에서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튜브의 5·18왜곡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는 플랫폼 정책에 국가, 지방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자체가 ‘5·18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육성과 더불어 보다 심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곱째,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디지털 세대의 태도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즉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비판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 2023년 모니터링에 나타난 갈등 담론

2023년 모니터링 결과는 2022년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 본 토론자는 왜곡의 내용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정치 환경이 ‘진보’에서 ‘보수’ 지형으로 바뀐 상황에서의 변화 양상이다. 2022.5. 출범한 보수정권 아래서 SNS환경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5·18담론 변화는 크게 3가지다. 첫째,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갈등. 둘째, 사죄 담론을 둘러싼 갈등. 셋째, 5·18단체의 갈등 등이다.

### ① 헌법전문 수록을 둘러싼 갈등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오래된 이슈다. 아쉽게도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 시도가 물 건너감으로써 불발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지난해 5·18담론의 큰 줄기를 형성했던 이유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 토론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됐고, 국회에서도 여야 동수로 대표를 뽑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국민의 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은 2023. 3. 13. 5·18정신 헌법수룩에 대하여 “그건 불가능하다. 반대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긍정적으로 발언한 사안을 당 지도부가 엇박자를 낸 것이다. 지만원에 이어 5·18혐오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세상에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넣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퍼센트”라고 말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다…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광주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의 반발 여론에 부닥쳐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 힘 당내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 발언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23년 4월 27일 전광훈 목사는 광주역광장에서 ‘5·18은 북한 간첩이 선

동한 폭동’이라고 다시 주장하였다. 이런 흐름을 살펴볼 때 SNS상에서 나타나는 5·18혐오표현의 진원지는 처음 출발점이 지만원과 극우 성향의 정치인, 조선일보 등에서 최근에는 극우 성향의 종교인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지난 2019. 2. 8. 당시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을 국회에 초청해 ‘북한특수군’ 주장을 일으킴으로써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이를 주도했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징계한 이후 보수진영 정치인들은 눈치를 보면서 5·18편향 발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경우 어느 정도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은 정치지형이 보수 쪽으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이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에서 5·18에 대해서만큼은 과거와 달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거나 편향하는 스탠스를 노골적으로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우 성향의 종교인들은 안하무인이다. 맹신도들에 둘러싸여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SNS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저돌적이고, 결국 사회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모니터링 결과는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사죄 담론을 둘러싼 갈등

2023년 5·18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장 큰 갈등은 특전사전우회의 5·18국립묘지 참배 시도다. 2023. 2. 19. 오전 9시 50분, 특전사전우회는 광주지역사회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5·18민주묘지를 기습 참배했다. 뒤이어 장소를 옮긴 특전사전우회는 대국민 공동선언문을 채택도 강행했다. 이들의 5·18묘지 참배와 대국민 선언문 채택은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2개 단체 집행부의 도움 속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한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특전사전우회의 5·18묘지 참배를 반대했다. 특전사의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 없는 참배’에 대한 반대였다. 이때부터 2023년 5·18은 ‘사죄 담론’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화두가 됐다. 특전사전우회의 대국민 공동선언문은 공수부대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 1980년 5·18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던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신군부 상층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고, 공수부대는 군대조직의 특성상 상부에서 시킨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즉, 공수부대의 명예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추됐고, 진압작전에 참여한 군인들 역시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여 개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이들의 주장이 적반하장이라고 분노했다. 반성과 사죄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는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오히려 1980년 5월 잔혹했던 학살의 기억을 소환하는 또다른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때부터 ‘사죄, 혹은 사과’를 둘러싼 찬반 담론이 SNS를 둘러싸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가해자에 대한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가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특전사전우회가 하필 이 시기에 ‘공수부대 = 피해자’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보수정권 하에서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의 위상을 회복하고 당시 부상 군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이런 사죄 논란이 한창이던 2023. 3. 30. 전우원의 5·18묘지 참배가 있었다. 전우원은 할아버지 전두환을 대신해서 사죄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

들은 그의 묘지참배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사실상 그를 용서했다. 특전사전우회와 전우원의 5·18 묘지 참배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줬고, SNS에서는 이 두 경우를 중심으로 찬반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SNS에서의 5·18을 둘러싼 ‘사죄 담론’ 확산은 2023년 보수 지형으로 변화된 한국 정치의 산물이다. 5·18단체의 ‘공법단체’화는 국가체제에 5·18단체가 포섭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보니 보훈부는 공법단체의 운영규정과 지원금 등을 통해 과거보다 5·18단체에 대한 통제가 수월해졌다. 그 결과로 보훈부는 5·18단체에 자신들의 정책의도를 관철시킨다. ‘정율성 공원’을 둘러싼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되고 있다.

### ③ 5·18단체의 갈등

2023년 SNS 모니터링에서 5·18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는 5·18단체의 내부 분열상에서 비롯됐다. 5·18단체의 분열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시기는 오래 전부터다. 1990년대 초반 5·18보상법 시행과 더불어 시작됐다. 하지만 2023년 5·18단체의 내홍은 그 이전과 결을 달리한다. 그 분기점은 2021년 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부터다.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 각 단체들은 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상자회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수익계약 권한도 주어진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공법단체의 이런 확대된 기회가 오히려 회원들의 분열을 가져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분열이 아니다. 이권을 노린 조직 내부의 일부 세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법단체의 집행부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보훈부는 이를 방관했으며, 오히려 이들을 보훈부의 정책방향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전사전우회의 5·18묘지 기습참배 시도가 바로 그런 5·18공법단체들(부상자회와 공로자회)과 보훈부의 합작품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아무튼 2개의 ‘공법단체’ 내홍은 5·18의 취약점을 끊임없이 노리면서 편협과 혐오를 일삼는 극우 인사들에게 더 없이 맛있는 먹잇감이었다. 이 같은 경향은 SNS에서 5·18가짜유공자설을 증폭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 3. 맺음말

2023. 1. 12. 대법원은 5·18왜곡과 혐오를 주도했던 지만원에게 2년형을 확정 짓고 구속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만원의 왜곡에 관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지만 번번이 구속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를 구속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쌓여왔던 그의 행적에 대한 SNS에서의 데이터 때문에 가능했다. 지만원 구속은 5·18왜곡에서 중대한 분수령이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아무리 왜곡, 혐오표현을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은연중에 지배했었다. 하지만 지만원 구속을 통해 SNS상에서 ‘명예훼손’ 혐의도 충분히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SNS에서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두 가지 방향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현재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포털이나 유튜브 등에 게재된 혐오표현을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지만원 구속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왜곡과 혐오 표현을 확산시키는 인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법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모니터링 결과물을 잘 가공한다면 국민여론 형성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는 이미 전 세계 민주주의에 큰 위협 요소로 떠올랐다. 포털과 SNS관련 규제기구의 효율적인 작동은 글로벌 공동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18의 사례는 ‘가짜뉴스’의 성공적인 규제사례로 국제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SNS 모니터링 시민 기구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활용 수준은 이미 세계적으로 선두 그룹에 속한다.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 부정 측면 역시 세계적이다. ‘지만원 구속’ 등 5·18 혐오표현에 대한 성공적인 규제사례는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가늠자인지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면서 이에 대한 국제규범을 우리가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토론

### 5·18 진상규명 보도의 중요성

#### 소중한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

---

2020년 초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평화봉사단 소속의 미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며 외교부 외교사료관에 보관된 문건을 뚫뚫그려 받아왔었습니다. 거기엔 평화봉사단 관련 문건뿐만 아니라 5·18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생산한 방대한 문건 또한 포함돼 있었고 그 중엔 중엔 대외비, 비밀문서 등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건들은 2010년을 전후로 모두 일반에 공개된 것들입니다. 외교문서 공개제도에 따라 외교부는 30년이 경과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는데, 5·18 시기인 1980년 전후로 생산된 이 문건들 또한 30년 후인 2010년 즈음 일반에 공개됐던 것이죠.

2020년부터 이 문건들을 훑어보기 시작한 저는 그 문건들에서 새로운 내용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된 지 40년, 일반에 공개된 지 10년도 더 지난 문건임에도 그 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상이 곳곳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5·18 40주년 특집 - 이방인의 증언' 기획을 통해선 평화봉사단 소속 미국 청년들이 광주 참상을 담은 사진과 유인물을 저 멀리 스웨덴까지 가져가 언론 보도로 이어지게 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엔 전두환 군부독재권력이 이들을 어떻게 쫓았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5·18을 왜곡했는지 또한 담겼습니다.

2021년엔 프랑스 국적의 여성이 5·18 두 달 후 합동수사본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내용을 그 문건들에서 발굴했습니다. 5·18을 전후로 외국인이 신군부에 불려가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이전까진 없는 줄 알았던 사례였습니다. 진실을 알리고자 한 이 여성을 탄압하기 위해 군부독재권력은 5·18을 끊임없이 왜곡했고 언론 또한 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같은 해엔 해당 문건들을 통해 당시 외무부가 '5.18 북한 개입설'을 세계 각지에 전파한 것을 수많은 문서들을 통해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외국의 한국대사관은 5.18을 왜곡하는 내용을 각국 정부와 언론에 전파하고 그러한 내용이 보도되면 그것을 공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5.18을 종료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취재할 때마다 5.18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점을 생생히 느낍니다. 여전히 5.18을 향한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진상규명이란 과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사례만 봐도 여전히 우리는 5.18의 진상까지 여러 걸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5.18을 취재하다 보면 문건 속에 박제돼버린 여러 이름을 만납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의 생생한 삶을 소환하고 조명하는 것이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보도물을 취재하며 다행히 문건의 내용을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을 수소문 끝에 찾기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몇몇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연로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이란 의제는 단순히 당위에 그쳐선 안 됩니다.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로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 **부록**

### **민주언론시민연합**

### **5·18민주화운동 언론모니터링 프로젝트 활동 경과**

---

#### **1. 2015~2022년 5·18민주화운동 왜곡 감시 활동 경과**

##### **o 2015년 :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사업 종편 ‘5·18정신 훼손’ 방송 감시**

- 10·19~12·18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민주화 왜곡을 잡아라!
- 종편 집중 모니터링, 종편 왜곡 대응방안 토론회
- 종편 왜곡 사례 리플렛 제작 : 민주화운동 펴냄사레 시민 공유

##### **o 2016년 :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사업 ‘5·18정신 훼손 방송감시와 제도적 문제 개선**

- TV조선, 채널A, MB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4~12월)
- 5·18 종편 모니터 및 보고서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응 분석 및 보고서 발표, 보고서 관련 카드뉴스와 동영상 제작 홍보
- 종편3사(TV조선, 채널A, MBN) 보도·시사프로그램 집중 모니터
- 5·18민주화운동에 막말 쏟아낸 종편,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었나?
- “전두환에게 책임 뒤집어씌운 사람 있다”는 종편(오마이뉴스)
- 2016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종편 시사토크쇼 모니터 보고서
- [동영상] 2016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대하는 종편의 자세
- ““괴물 입” 물리칠 영웅, 바로 당신” (오마이뉴스)
- 방송소위 회의록 속 종편 봐주기 심의 행태, 가관이다

##### **o 2017년 : TV조선채널A·MBN 보도·시사프로그램(3~8월) + 일간베스트 기사물(3~9월)**

- 보수논객들 5·18 유가족 폄훼 발언 확산

- 전두환 회고록 ‘홍보’한 종편, 오보·막말·편파는 줄었지만 전두환 감싸기 여전
- 일간베스트 모니터링 결과 : 극우매체-극우인사 블로그-일베 회전식 순환

#### ○ 2018년 : 5·18민주화운동 방송모니터 및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

- TV조선·채널A·MBN·JTBC/YTN·연합뉴스TV 보도·시사프로그램(4~10월)
- TV조선 : 시사프로그램 5월에 5·18 1분도 다루지 않음
- MBN ‘5·18 진상규명’ 강조(전두환 회고록 재판, 헬기난사 문건 공개 등)
- 보수정부 5·18 추모곡까지 부정, TV조선·채널A 침묵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도 대부분 침묵
- “‘임을 위한 행진곡’ 모욕 광고, 조선일보 게재”, JTBC만 언급
- 가짜뉴스의 2차 가해 : 완벽한 가짜뉴스 ‘5·18민주유공자 특혜설’
- 가짜주장 등 팩트체크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뉴스타운> → 블로그, 유튜브 확대재생산
-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국민제보 접수) 운영

#### ○ 2019년 : 5·18민주화운동 신문방송 및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모니터(3~10월)

- 경향은 5·18 진상규명하고 조선은 전두환 재판에 입 ‘꼭’
- 5·18로 진보와 보수 싸움 붙이는 조선일보 칼럼 위스트3
- 5·18에 대해 교육하면 편향적인 건가요?
- 5·18 외면하고 광주 시민에 ‘아수라장’ 만든다는 TV조선
- 5·18 기념식 당일 시민 항의에 황교안 바짓단 흠투성이 됐다는 TV조선
- 5·18 일정 보도 않는 TV조선
- 전두환 재판은 실시간 중계, 진상규명은 0? 종편이 5·18 다루는 방법
- 종편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 부정’, ‘북한군 개입설’ 나온다
- “유공자 중에 가짜도”, ‘5·18 대신 “일본 식민지배·북한 남침 한국 변화시켜”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18 망언
-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 ○ 2020년 : 5·18민주화운동 신문·방송 및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모니터(4~10월)

- “전두환 정권 단군 이래 최대 호황” “헬기 사격 몰랐다고 변호하라” 5·18 40주년에 나온 낮부끄러운 보도들
- 5·18 40주년에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보도는 부족했다
-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또 외면과 ‘갈등 조장’ 반복한 TV조선·채널A
- ‘5·18특별법’ 역사왜곡 처벌 취지보다 과잉입법, 표현자유 침해만 부각한 언론
- 조선일보 “5·18특별법, 신세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는 협박”

- ‘추미에 불기소 처분’ 비판에 5·18 댓글 악용한 조선일보
- 전두환 결심공판 아예 보도하지 않은 KBS, 공영방송 맞죠?

#### ○ 2021년 : 5·18민주화운동 왜곡편취 표현 모니터(2~10월) \*광주전남민언련

- 분석대상 : 네이버, 다음, 유튜브 5·18민주화운동 왜곡·편취 댓글
- 분석내용 : 왜곡·편취 댓글, 주제별 내용 분류(북한군, 유공자, 폭동 등 관련 위주)
- 왜곡·편취 댓글 : 네이버 964개 > 유튜브 433개 > 다음 219개  
5월 342개 > 10월 341개 > 8월 179개
- 왜곡·편취 댓글 2차 출처 : 지상파·지역민방 > 종편 > 인터넷언론 > 통신사

#### ○ 2022년 : 5·18민주화운동 왜곡편취 표현 모니터(4~10월)

- 온라인 기사, 기사 댓글, 유튜브 5·18민주화운동 왜곡·편취 표현 분석
-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하기 쉬운 뉴스기사 댓글(1위), 유튜브(2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편취 표현 현황 파악
- 문제 표현 및 허위조작정보 등 플랫폼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응 요청
- 5·18민주화운동 왜곡·편취 표현 및 허위조작정보 생산·확산 방지 법적 대응 자료 확보
- 유튜브엔 ‘북한군 개입설’, 네이버 댓글엔 ‘가짜 유공자설’ 가장 많았다(4월 보고서)
- 보수여권 5·18 추모에 반발하는 왜곡·편취 댓글 급증(5월 보고서)
-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홍준표 발언, 왜곡·편취 표현 확산 한몫(6월 보고서)
- 민주화운동 둘러싼 정쟁, 5·18 왜곡·편취 표현 확산 부추긴다(7월 보고서)
- 계속 5·18 왜곡하는 유튜브 채널, 방심위 손 놓았나(8월 보고서)
- 42년 만에 드러난 5·18 암매장 진실, 보도 늘며 왜곡·편취도 급증(9월 보고서)
- ‘뒤늦은 5·18민주화운동 무죄선고’ 기사에조차 왜곡·편취 댓글 달렸다(10월 보고서)

## 2. 2023년 5·18민주화운동 왜곡 감시 활동 경과

### 1) 사업 개요

- 분석대상 : 온라인 기사, 기사 댓글, 유튜브 5·18민주화운동 왜곡·편취 표현
- 사업기간 : 2023년 4~10월
- 사업개요
  -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하기 쉬운 뉴스기사 댓글(1위), 유튜브(2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편취 표현 현황 파악
  - 문제 표현 및 허위조작정보 등 플랫폼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응 요청
  - 5·18민주화운동 왜곡·편취 표현 및 허위조작정보 생산·확산 방지 법적 대응 자료 확보

## 2) 월별 모니터 보고서

### o 5월 : 5·18 본질보다 여야 대결과 오월단체 갈등 중계만 집중 ‘가짜 유공자’ 주장으로 왜곡·편향 여전, 장세동과 극우인사 찬양까지

-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하고, “5·18 헌법전문 수록은 어불성설” 주장까지
- 5월 ‘가짜 유공자설’ 왜곡·편향 댓글 급증, 허위보도가 이유였다
- 스카이데일리 ‘유공자 명단 입수’ 보도, 불가능·부적절
- 유튜브 긍정 댓글 증가, ‘전우원 응원’ 248개로 최다

### o 6월 : SBS, 5·18왜곡 댓글비율 가장 높아·유튜브 ‘가짜 유공자’ 반복 콘텐츠 제재해야

- SBS, 왜곡·편향 댓글 비율 80%로 가장 높아
- 특전사 동지회와 시민사회 갈등, ‘기타’ 왜곡·편향 증가
- 조선일보 출신 최병목, 가짜 유공자 주장 반복·강화
- 구글, 5·18 왜곡·편향 유튜브채널과 영상 적극 제재 나서야

### o 7월 : ‘가짜 유공자설’보다 ‘호남지역 비하’ 댓글 급증

- 조선·KBS·중앙, 왜곡·편향 댓글 비율 평균 2배 이상
- 7월 집중호우와 지진 보도 댓글에 ‘지역 비하’ 압도적
- 진짜 5·18 보도는 29건뿐, 오월정신 계승 보도 꾸준해야
- 5·18왜곡 일삼는 조우석·지만원·김태산 지지 댓글 쇄도

### o 8월 : 보수언론, 윤석열 정부 ‘정율성 색깔론’ 가세, ‘호남 비하’ ‘상대 진영 혐오’ 댓글 급증

- 조선일보와 SBS, 왜곡·편향 댓글 비율 평균 2배 이상
- 왜곡·편향 댓글 ‘지역 비하’ 66.6% 압도적
- 정율성 역사공원, 윤석열 정부 색깔론에 철 지난 이념논쟁
- 정율성 역사공원 유튜브 영상에서 혐오 댓글 등장







민주언론시민연합



5·18기념재단  
The May 18 Foundation